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16. 6.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법무부 본부 : 13건)

1.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촉법소년의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p)
2. 법무부가 제기된 민원의 1/3 가량을 관련 부서에 이첩하였는데, 이 경우 도리어 민원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민원의 이첩에 신중할 것 -----2(p)
3.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의 활용률이 낮는데,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2(p)
4.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를 교도소장이 구성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교도소장의 의견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3(p)
5. 범죄피해자 지원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적 제고에 힘쓸 것 -----3(p)
6. 범죄피해자,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기소 및 공판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보복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 -----4(p)
7. 수사 중 자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p)
8.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검정 등 결혼이민비자의 심사 기준 강화로 부부결합이 해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4(p)
9. 가정폭력사건, 성범죄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5(p)

10. 지나치게 복잡한 형사법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형사특별법 통합 개정안을 검토할 것-----5(p)
11.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석방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5(p)
12. 결혼이민자 등 재한외국인 대상 법률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것-----5(p)
13. 검사의 행정기관 파견을 자제하고, 검사 인력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6(p)

(대검찰청 : 12건)

1. 과학수사부와 과학수사 관련 기관이 협업하고, 기존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6(p)
2. 미성년자 성매수자, 성매매 재범자 및 공직자에 대하여 존스쿨 제도를 신중히 적용하고, 성매매 재발방지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7(p)
3.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출국금지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7(p)
4.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에 노출되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7(p)
5.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8(p)
6. 횡령·배임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액수가 커지면 양형 기준이 무의미해지는 경향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8(p)
7. 마약신고 보상금 제도 운용을 재검토할 것-----9(p)
8. 범인은닉 및 도피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현행법상 형량 상향을 고려하며, 해외도피사범 관리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9(p)
9. 산업재해 사망사건 중 형사상 과실로 인한 입건 자료 제출할 것 -----10(p)
10. 혼합형 DNA 시료 보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0(p)

11. 수사 중 자살자의 경향 분석,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하여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1(p)
12. 묻지마 범죄, 보복범죄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11(p)

(서울고등검찰청 : 11건)

1. 혼합형 DNA 자료의 경우 DNA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의 운영지침을 재검토할 것 -----13(p)
2.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영상녹화조사의 활용률을 제고할 것 -----13(p)
3. 범죄자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도피자의 검거 및 인도에 최선을 다할 것 -----13(p)
4. 보복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13(p)
5. 지식재산시대를 맞이하여 검찰 내부의 전문조직 구축, 전문인력 육성에 힘쓸 것 -----14(p)
6.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장청구 기각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14(p)
7.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찰 전체의 긴급체포 건수는 줄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체포 후에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긴급체포의 남용으로 불 소지가 있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불필요한 긴급체포를 자제할 것 -----15(p)
8. (의정부지방법검찰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비율이 높으므로, 기초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기소 처분에 신중할 것 -----15(p)
9. (수원지방법검찰청) 전체 외국인 범죄의 1/5 이상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5(p)

10. (인천지방검찰청) 월선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여 해양환경 훼손 및 어민 피해를 방지할 것-----17(p)
11. (인천지방검찰청) 수입농산물의 관세포탈, 무자료 유통 등으로 농민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국세청, 관세청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18(p)

(대전고등검찰청 : 6건)

1. 특허전문검사를 확보하고, 대전고등검찰청이나 대전지검을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 검찰청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19(p)
2. 검찰 수사 중 자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20(p)
3. 가족과 떨어져서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21(p)
4. 영상녹화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22(p)
5. 피해자 구조와 상담지원 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3(p)
6.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관내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24(p)

(광주고등검찰청 : 6건)

1. 검찰 수사 중 자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25(p)
2. 가족과 떨어져서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25(p)
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검찰 신뢰회복을 위하여 심야조사 등을 지양할 것-----25(p)
4.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26(p)

5. 마약사범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재범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26(p)
6. 해경과 유대를 철저히 하여 중국의 불법 어로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6(p)

(대구고등검찰청 : 15건)

1. 대구고검 청사의 인프라 보완 및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7(p)
2. 묻지마 범죄 단속에 노력할 것 -----27(p)
3. 검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 건강 문제 등 직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28(p)
4.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직무교육 실시사항을 확인할 것-----28(p)
5. 검찰청 내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28(p)
6. 기소중지 사건을 살펴 중국처분 가능한 사건은 중국처분에 노력할 것-----29(p)
7.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9(p)
8. 아동성범죄 재범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9(p)
9. 최경환 부총리 인턴의 중기공단 불법취업 의혹 엄정 수사할 것 -----30(p)
10. 대구 조희팔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 -----30(p)
11. 구공판 무죄선고 비율의 증가로 인권 피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검에서 철저하게 감독할 것-----30(p)
12.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구속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실무적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협박·모욕을 일반 협박·모욕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등 실무적으로 스토킹을 중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30(p)
13. 대구 보복범죄 사건 발생률이 높으므로 사전 예방에 노력할 것 -----31(p)

- 14. 성폭력사범 재범률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1(p)
- 15. 국가 보조금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속할 것
-----32(p)

(부산고등검찰청 : 17건)

- 1.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32(p)
- 2. 형사부의 인원 대비 업무량을 조정하여 질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 -----34(p)
- 3. 묻지마 범죄 단속에 노력할 것 -----35(p)
- 4. 검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 건강 문제 등 직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36(p)
- 5. 부산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사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할 것 -----37(p)
- 6. 부산 해외도피사범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37(p)
- 7. 부산지검 관내 밀수사범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밀수사범을 약식 기소하기보다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강력히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38(p)
- 8. 기소중지 사건을 살펴 종국처분 가능한 사건은 종국처분에 노력할 것-----38(p)
- 9. DNA 채취 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실무에서 중범죄, 재범 위험성과 관계없는 사유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고려할 것
-----39(p)
- 10. 윤석민 전 의원 금품수수 사건, 김맹곤 김해시장 사건 등을 엄정 수사할 것-----39(p)
- 11. 울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 실적 확보에 노력할 것
-----40(p)
- 12. 사자방 등 공기업 대형부패 사건을 엄단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40(p)
- 13. 구공판 무죄선고 비율의 증가로 인권 피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검에서 철저하게 감독할 것-----41(p)

14. 부산지검의 수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향후 성추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교육할 것-----41(p)
15. DNA 사전 채취 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고,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집회,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을 주의할 것
-----41(p)
16. 국외도피사범 등에 대한 기소중지를 지양할 것 -----42(p)
17. 국가 보조금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속할 것
-----43(p)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p>1.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촉법소년의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법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및 선도활동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 시행(‘15. 6.) - 가족·사제 동행캠프의 전국 센터 확대 운영(‘16. 2.), 비행유형별 예방 프로그램의 고도화(‘16. 12.) 추진 ○ 소년원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가족 관계 회복과 다양한 인성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및 수요자 중심의 교정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랑캠프, 보호자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행(연중), 원거리 거주 보호자의 면회불편 해소를 위한 ‘스마트폰 화상면회제’ 도입(‘15. 8.) - 개별특성과 환경요인을 고려한 처우과정인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 전국 소년원에 확대 운영(‘16. 1.) ○ 보호관찰 면담론 적용 및 법교육 강화 등 저연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적극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 면담론 개발(‘15. 12.) - 전국 보호관찰 담당자 관련 직무 교육 실시(‘16. 4.) - 소년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관리를 위한 재범 위험성 평가 전면 실시(‘16. 7.)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 미만의 저연령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담임교사, 법사랑 위원 등을 활용한 멘토링 결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원호 적극 실시 ※ '15년 저연령 보호관찰 대상자(1,490명)에 원호 531건 및 멘토링 결연 286건 실시 																							
	2. 법무부가 제기된 민원의 1/3 가량을 관련 부서에 이첩하였는데, 이 경우 도리어 민원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민원의 이첩에 신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 중,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폭언·폭행, 차별적 처우 등을 사유로 한 민원과 같이 민원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은 직접 조사·처리하고 있음 ○ 다만, 그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실·국·본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성 진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직접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절치 못한 이첩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업무 처리하겠음 																							
	3.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영상 녹화조사의 활용률이 낮았는데,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피조사자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녹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영상녹화조사 활용률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수감기간인 2015년 8.말 기준 활용률은 16.3%로 증가 추세에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794 1845 1425 205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2011년</th> <th>2012년</th> <th>2013년</th> <th>2014년</th> <th>2015.8.</th> </tr> </thead> <tbody> <tr> <td>조사건수</td> <td>222,130</td> <td>230,124</td> <td>232,518</td> <td>241,577</td> <td>154,669</td> </tr> <tr> <td>조사인원</td> <td>12,665</td> <td>18,035</td> <td>23,686</td> <td>32,052</td> <td>25,218</td> </tr> <tr> <td>실시율</td> <td>5.7%</td> <td>7.8%</td> <td>10.2%</td> <td>13.3%</td> <td>16.3%</td> </tr> </tbody> </table>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	조사건수	222,130	230,124	232,518	241,577	154,669	조사인원	12,665	18,035	23,686	32,052	25,218	실시율	5.7%	7.8%	10.2%	13.3%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																				
조사건수	222,130	230,124	232,518	241,577	154,669																				
조사인원	12,665	18,035	23,686	32,052	25,218																				
실시율	5.7%	7.8%	10.2%	13.3%	16.3%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 앞으로도 전국청 화상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기법·우수사례 전파, 우수청 포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영상녹화조사 활용률을 제고하겠음
	4. 교정시설의 귀휴심사 위원회를 교도소장이 구성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교도소장의 의견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외부위원 증가를 통한 외부통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형자 귀휴제도 종합 개선방안’ 마련 시행(’15.05.21.)
	5. 범죄피해자 지원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적 제고에 힘쓸 것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상 기법 개발 T/F를 구성하는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 활성화 워크숍 개최(’15. 9. 17.) - 구상 활성화 방안 마련(’16. 3.) - 구상 활성화 TF 운영(’1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대검, 일선 담당자로 구성 · 구상시스템 체계화, 기법개발 등 - 내부 통신망에 구상 활성화를 위한 지식 커뮤니티 개설(’16. 4.) - 대검 구상실적 평가 시행(’16. 5.) - 구상실무 운용 지침 마련 예정(’16. 6.) - 구조금(구상) 업무편람 제작 예정(’16. 6.) - 실적 우수 청 포상 예정(’16. 상·하반기) -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예정(’16. 하반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워크숍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15년 말 구상실적은 6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2억원 대비 300% 이상 상승하였음 ※ 일본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고, 미국의 경우도 2000년 기준 가장 높은 주가 10%에 불과함 ○ 앞으로도, 구상기법 개발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검찰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구상 실적을 제고해 나가겠음
	6. 범죄피해자,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기소 및 공판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보복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 상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하고 있음 ○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공소장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를 최소화하고,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7. 수사 중 자살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자살방지 대책을 연구 진행 중이고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수사현실에 부합하는 자살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8.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검정 등 결혼이민 비자의 심사기준 강화로 부부결합이 해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한국어능력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공관 영사가 비자를 즉시 불허하지 아니하고 다시 영사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부여('15. 11.)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9. 가정폭력사건,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가정폭력·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0. 지나치게 복잡한 형사법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형사특별법 통합 개정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1. 형사법 체계 정리를 위해 일부 형사특별법을 통합 개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규정 「형법」 편입 ○ '16. 4.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통합에 관해 논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통합 개정 추진
	11.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운영 개선(안)’ 시행('15.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범·재산범 등 생계형 범죄, 보호사범(환자, 장애인, 고령자), 교통사범에 대해 확대 시행
	12. 결혼이민자 등 재한 외국인 대상 법률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법 교육 수요조사 실시('16. 2.)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재한 외국인 대상 법 교육 277회 실시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13. 검사의 행정기관 파견을 자제하고, 검사 인력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 들어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상당 수 감축하였고, ○ 정부 내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외부 기관 파견을 최대한 자제하여 감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에도 외부 파견기관에 대한 업무내용 및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검사 파견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대검찰청	1. 과학수사부와 과학수사 관련기관이 협업하고, 기존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의 19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2016 춘계 과학수사 학술세미나·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심포지엄'을 개최(2016. 5. 27.)하는 등 유관기관 및 학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6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고 있고, 2014년 12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바이오 기반 법과학원천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기획 및 선정, 연구진행 자문, 연구결과 공유·평가 등 업무 협력으로 법과학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p>※ 바이오기반 법과학원천기술개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학 첨단화를 위한 유전화학적 몽타주기술(수사단서) 발굴 개발사업 (2014) - 약독물 중독 신속검사법 개발 및 현장지원시스템 구축사업(2015) - 패턴인식 기반 법과학 증거 신뢰도 제고 연구사업(2016 예정) <p>○ 향후에도 관련기관과 협업하고, 기존 인프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2. 미성년자 성매수자, 성매매 재범자 및 공직자에 대하여 존스쿨 제도를 신중히 적용 하고, 성매매 재발방지라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	<p>○ 미성년자 대상 성구매자, 성구매 재범자 등에 대해서는 존스쿨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성매매 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하였음</p> <p>○ 존스쿨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음</p>
	3.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을 출국금지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	<p>○ 출국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정지 중 해지할 사유 발생 시, 즉시 출국정지를 해지하는 등 대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국정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음</p>
	4. 인터넷·SNS 등을 통해 마약에 노출되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p>○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검 등 6대 지검에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 요원 배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하반기 중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사이트 즉각 폐쇄·차단 조치 -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편성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거래 집중 단속 ○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 의율하여 엄단토록 전국청에 지시하였음 ○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하여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토록 전국청에 지시하였음 ○ 2016년 9월부터 검사가 직접 전국 중·고교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할 계획임 ○ 앞으로도 청소년 마약범죄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5.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시민위원회 실적 우수청 및 위원에 대한 검찰총장 표창을 신설하는 등 운영을 독려하고 있음 - 2016년 2개청 및 위원 6명 표창 수여 예정 - 향후 점진적으로 위원표창 확대 예정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임
	6. 횡령, 배임, 뇌물수수 액수가 커지면 양형기준이 무의미해지는 경향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령·배임, 뇌물범죄 중 피해 또는 뇌물 액수가 고액인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에 따른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고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 또한 구형의견 및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음
	7. 마약신고 보상금제도 운용을 재검토할 것	○ 마약류 보상금은 제보자의 신고의식 고취와 함께 검거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통해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해 법령상 도입된 것임 - 검거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4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부터 제26조)에 규정 · 관세청의 밀수범죄신고 보상금 등도 검거공무원 포상금 지급 - 2015년 검거포상금이 신고보상금보다 다액이나, 1건당 신고보상금이 검거 포상금의 약 9.5배에 상당 ○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마약류보상금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음
	8. 범인은닉 및 도피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현행법상 형량 상향을 고려하며, 해외 도피사범 관리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 범인은닉 및 도피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법정형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음 ○ 제5기 양형위원회(2015. 4. ~ 2017. 4.)에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논의 중인 범인은닉·도피·증거인멸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기준 설정 위해 역할을 다하겠음 ○ 국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집중 송환을 계속 추진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한 강제송환 등 ○ 현재 대검 형사1과와 공판송무과에서 해외도피사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검찰 국제협력단에서 해외도피사범 송환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9. 산업재해 사망사건 중 형사상 과실로 인한 입건 자료 제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사망사건 중 형사상 과실로 인한 입건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처분현황(2013. 1. ~ 2015. 12.)은 아래와 같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처분현황(2013. 1. ~ 2015. 12.)											
(단위 : 건)											
연도	접수 계	처 리									미 제
		기 소			불기소				기타	이송	
		구 공판	구 약식	협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 권 없음	각하			
2013	5,676	132	4,356	215	494	0	19	165	72	31	192
2014	4,909	181	3,732	283	247	0	16	219	85	29	117
2015	4,694	232	3,369	291	221	0	17	337	75	23	129
※ '기타'는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등											
	10. 혼합형 DNA 시료 보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혼합형 DNA정보의 보관 및 DNA-DB 수록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과수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DNA-DB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1. 수사 중 자살자의 경향 분석,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하여 자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살예방협회에 ‘수사 중 자살 원인 분석 및 예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자살자 경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상담 진행 중 ○ 현재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자살방지 대책을 연구 진행 중이고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수사현실에 부합하는 자살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12. 묻지마 범죄, 보복 범죄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p>[묻지마 범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묻지마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 및 재범방지 측면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Ⅲ」를 발간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음(2015. 9.) ○ 전방위적 강력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강력사건에 대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시행 지시(2016. 2.) -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강화 지시(2016. 2.) - 살인범죄 처벌 강화 및 DB구축을 위한 양형분석표 작성 지시(2016. 3.)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철저 적용 지시(2016. 4.)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불명 변사자 부검 강화 및 법의학 자문 권고제 시행(2016. 4.) ○ 주취·정신장애로 인한 경미범죄자에 대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법」의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 [보복범죄] ○ 보복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 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음 ○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공소장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를 최소화하고,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2016. 5. 19.) - 소송 계속 중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시 신상정보 보호 조치 의무화 ○ 보복우려가 있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음(2015. 10.~) - 경찰과 협의하여 위치확인장치를 수사초기단계부터 지급하고, 비상 호출시에도 112 출동 등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신변보호 조치 강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 혼합형 DNA 자료의 경우 DNA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의 운영지침을 재검토할 것 2.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영상녹화조사의 활용률을 제고할 것	○ 대검에서 혼합형 DNA정보의 보관 및 DNA-DB 수록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과수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DNA-DB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특히, 영상녹화 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속기사를 적극 활용, 조서작성을 간소화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3. 범죄자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도피자의 검거 및 인도에 최선을 다할 것	○ 범죄자 해외도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전의 신속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통해 예방토록 노력하겠음 ○ 중요 해외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외교부, 경찰청, 대검 국제자금 추적팀 등과 긴밀히 협조, 검거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4. 보복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대검의 「보복범죄 엄정 대처」 지시를 철저 준수하여 ① 특가법상 보복범죄 적극 의율 ② 원칙적 구속·양형기준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 ③ 피해자 등과 핫라인 구축 및 밀착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가명조서’ 작성, 법정 동행, 신변보호 시설 제공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신고자 및 증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5. 지식재산시대를 맞이하여 검찰내부의 전문조직 구축, 전문인력 육성에 힘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11. 대전지검을 특허범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공인전문검사 등 전문수사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을 비롯하여, ○ '16. 상반기, 특허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허수사자문관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중점검찰청 제도, 공인전문검사·수사관 제도,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인력 육성에 힘쓸 예정임
	6. 법원과 견해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장 청구 기각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장청구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영장청구시에도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검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직접 관여 등을 통해 구속요건 및 필요성 판단과 관련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7. (서울중앙지검) 검찰 전체의 긴급체포 건수는 줄고 있으나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으며, 긴급체포 후에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긴급체포의 남용으로 불 소지가 있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불필요한 긴급체포를 자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체포는 마약사범 등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검의 긴급체포 인원은 감소 (2015년 상반기 38명, 하반기 30명) 하였고, 구속영장 청구율도 상승 (2015년 상반기 81.5%, 하반기 86.7%)하는 추세임 ○ 향후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체포요건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긴급체포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강제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8. (의정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비율이 높으므로, 기초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기소 처분에 신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4. 현재, 의정부지검의 재기수사명령 비율은 11.43%로, 전년 동기 비율인 12.7%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의정부지검은 2016. 4.부터 불기소 처분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숙련된 수석검사(4명)로 하여금 불기소 사건 처분을 전담하도록 하는 ‘수사절차 이원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9. (수원지검) 전체 외국인 범죄의 1/5 이상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국정감사 수감 이후, 경기도 외국인 범죄 주요 현황을 분석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등록외국인수 증가로 전년 (2014년) 동기 대비 외국인범죄가 약 23% 급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별로 중국(67.4%) → 태국(5.5%), 베트남(4.3%) 순으로 발생 - 죄명별로 살인(67%), 교통(77%), 폭력(72%)의 중국인 비율이 높음 ○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실정을 감안하여,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 간담회를 개최(2015. 11. 20.)하여 중국인 범죄의 예방과 대책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사랑 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산하에 ‘외국인특별위원협의회’를 구성하였고(2015. 11. 12.),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안산지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사건 처리의 각 단계에서의 점검 사항을 요약·정리한 외국인범죄 사건처리 점검표를 마련(2015. 11. 6.), 검찰 내부게시판에도 게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음 ○ 올해(3. 2.)에는 수원지검에서 직접 안산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거리를 방문하여 외국인 관리 및 복지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범죄 예방을 위한 기반 상황을 직접 확인 하기도 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범죄 발생시 원활한 공조체제 운용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안산지청, 2. 24.)를 실시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대검에 건의(안산지청, 2. 11.)하였음 ○ 향후에도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벌하여 모방범죄 양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10. (인천지검) 월선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여 해양환경 훼손 및 어민 피해를 방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을 피해 서해 NLL 부근에서 남북을 오가며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계속 증가하고, 단속에 대한 저항도 갈수록 조직화, 폭력화되고 있음 ○ 인천지검은 인천해경과의 간담회(2016. 5. 10.)를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철저 단속 방침을 논의하였고 엄정 대응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36척 나포, 77명 입건(59명 구속), 2016. 5. 25. 현재 22척 나포, 56명 입건(32명 구속)으로 단속 건수 증가 추세임 ○ 인천지검은 불법조업 중국선박에 엄정 대응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고 해경을 지휘, 사건수사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불법조업 중국선박에 대하여 적극 압수하고 몰수 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는 선박 관리 및 보관 장소와 비용 등의 문제로 압수를 하지 못하였으나, 해경에서 예산문제를 해결하여 올해부터 적극 압수 및 몰수구형 중임(현재 나포된 22척 중 담보금 미납 선박 18척을 압수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과정에서 중국선원의 폭력 대응시 공무집행방해죄 적극 의율 - 선원이 도주하고 텅빈 배만 나포된 경우에도 간부선원 인적사항 특정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하고 선박을 압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 철저 <p>○ 인천지검은 향후에도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여 해양환경 훼손 및 어민 피해를 방지할 것임</p>
	11. (인천지검) 수입농산물의 관세포탈, 무자료 유통 등으로 농민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국세청, 관세청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p>○ 인천지검은 수입농산물의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범죄에 대하여는 외사부를 중심으로 인천세관을 철저히 수사지휘하여 중점단속하고 있음</p> <p>○ 또한, 중국 보따리상 등 무자료 유통 수입농산물은 식품 전담부서인 형사 4부를 중심으로 인천세관과의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노력하고 있음</p> <p>○ 앞으로도 인천지검은 인천세관과 협력하여 수입농산물 관련 관세포탈, 불법유통 범죄에 대해 적극 단속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1. 특허전문검사를 확보하고, 대전고등검찰청이나 대전지검을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검찰청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고검에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를 지정, 관련 항고사건을 배당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항고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전 고·지검 검사, 특허심판원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에 노력하고 있음 <p style="margin-left: 20px;">※ 특허소송실무연구회: 2012.3.~2016.5.까지 총 30회 개최, 자료집 발간 2회 (대전고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1. 16.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였음 ○ 2016. 1. 상반기 검사인사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담 검사 3명(변리사자격 보유자, 전기공학 전공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보유자)을 배치하고, 자문위원(4명), 수사관(5명) 등 전담 인력을 강화하였음 <p style="margin-left: 20px;">※ 자문위원은 특허청 소송 특허심판관(4급)으로 각 전기·통신, 기계, 화학, 디자인·상표 분야별 기술 분석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은 전문사건이송제도를 활용하여 대전지검에서 집중적으로 이송 받아 처리 중이며, 자문위원들이 재경지검 이외의 청 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16. 6. 1.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시한부기소중지 제도 폐지로 대전지검에서 관련사건을 보다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등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검찰청으로 육성해 나아갈 예정임 (대전지검)
	<p>2. 검찰 수사 중 자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철저히 준수할 것임 ○ ‘피의자의 자살예방 및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의 자살예방 및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① 자살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사단계에서 수사보안 유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최소화, 피의자에 대한 반복적 소환 자제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조사 중 자살징후 포착시 피의자 가족 등에게 통보 - 긴급체포 및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 등 강제집행 활용 ②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출석 통보시 변호인 선임권을 사전 고지하고,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적극적으로 허가 - 영상녹화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심야조사 지양 <p style="text-align: right;">(대전지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3.부터 업무혁신 방안을 실시하여, 검찰수사 중 검찰이 사건관계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당사자에게 증거·의견제출 기회 및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처리사건의 당사자 450여명 상대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사자 중 50%가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라고 응답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만족도가 높아진만큼 검찰수사 중 자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청주지검)
	3. 가족과 떨어져서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및 부서장이 소속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대검에서 시행중인 ‘검찰직원마음사랑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토록 독려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적극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div style="text-align: right;">(대전고검)</div> ○ 청내 각종 동호회 활동 적극 장려 및 조직활성화 행사를 통한 직원간 유대감 강화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직원간담회 개최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명소 및 문화예술 행사 안내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있음 ○ 독신자숙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정비 및 대처 매뉴얼을 정비하였음 (대전지검) ○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병가, 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등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청주지검)
	4. 영상녹화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외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변복이 예상되는 사건,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는 영상녹화를 필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그외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 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사건관계인의 수사태도 등을 법정에 현출시킬 필요가 있는 사건 등에 대하여도 영상녹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p>※ 영상녹화조사 실적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한해 총 1,060명 조사 - 2016. 1.~ 4.까지 275명 조사 [전년 동기(159명) 대비 72.96%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녹화물은 서버에 저장되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p>있으므로 종래 필수적으로 CD에 저장 후 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한 지침을 라벨지 출력으로 간이화함으로써 영상녹화조사 편의성을 개선하였음(대검예규 제798호) (대전지검)</p> <p>○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조직범죄의 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고, 그밖에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5년 총 104건(119명)에 비하여 2016년 1~5월 약 5개월간 301건(31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청주지검)</p>
	5. 피해자 구조와 상담 지원 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경제적 지원 심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5.9.~2016.5. 범죄피해자구조금 34건 총 752,166,890원, 경제적 지원금 23건 총 107,677,479원 지급</p> <p>○ 사건 관계인을 적극적으로 소환하여 주장내용을 경청하고, 피해 상담 지원 의뢰를 적극 시행하고 있음 ※ 2015.9.~2016.5. 피해자 상담 총 166건 (상담 일지 작성건수 77건) (대전지검)</p> <p>○ 2016년 5개월간 총6회에 걸쳐 범죄 피해자구조심의회, 피해자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피해자 구조·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p>※ 2016. 2. 24.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3. 9. 피해자 전담 경찰관 간담회, 3. 18.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4. 4. 피해자지원 대책회의, 5. 13. 친부강간 사건 피해자지원 간담회, 5. 24.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개최</p> <p>○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교양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청주지검)</p>
	6.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관내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	<p>○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상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p> <p>※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2회 개최</p> <p>○ 아동학대사례자문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고,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 받아 사건처리 중 (대전지검)</p> <p>○ 계부의 사체유기 사건 등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의학과 전문의, 아동복지학과 교수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p> <p>※ 2016. 2. 3.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3. 8.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4. 7. 계부의 사체유기 사건 관련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회의 개최 (청주지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 검찰 수사 중 자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등 극단적 행동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철저 지시(대검 정책기획과-1612, 2015. 1. 29.)」에 따라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기관장 및 전문 인권강사가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2. 가족과 떨어져서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의 건강검진 강화, 맞춤형복지 항목 중 정밀종합건강진단 활용 권고, 건강관리 지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공무원 건강관리 세부시행지침』을 시행 중임 ○ 그 외에도 간담회를 통한 직원들의 애로 청취, 청간 인사이동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 및 고충 사항 확인 및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하여 심야조사 등을 지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 분량·인원이 많아 심야조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4년 광주지검(지청 포함) 심야조사는 총 232명으로 2013년 43명보다 540% 증가하였으나, 그중 세월호 사건 관련 인원이 162명으로 전체의 69.7% 차지 ○ 2015년 상반기 심야조사는 30건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인권보호수사준칙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심야조사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4.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인권보호와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분석 기법이나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실시하고 조사시 충실한 수사로 가급적 반복조사를 지양하는 등 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음
	5. 마약사범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재범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마약사범 중 재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처벌하고, 특히, 단순 투약 초범에 대하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치료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6. 해경과 유대를 철저히 하여 중국의 불법 어로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15. 2.부터 담보금을 대폭 상향하고 영해침범 어로사범과 담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불법조업사범, 단속 방해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2015. 1. 군산지청에서 전국 최초로 중국 불법조업어선 2척을 몰수하는 등 주요 불법조업에 대하여는 어선을 몰수조치하는 등 엄정대처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청에서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와 협의하여 2015. 11. 2.부터 팩스 지휘를 통하여 신속하게 나포중국 어선 담보금 결정을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5. 11.부터 2016. 3.경까지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3,000톤급 대형함정 각 1척을 추가 배치하였음
대구고검 대구지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구고검 청사의 인프라 보완 및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묻지마 범죄 단속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고검은 청사 내 아스콘 포장·주차블럭 공사, 종합민원실 내 대구은행 출장소 개설, 본관1층 현관 출입구 자동문 교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묻지마 범죄는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범죄행위로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할 것임 ○ 대구지검은 강력전담 검사 4명이 경찰관들과의 긴밀한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음 ○ 묻지마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바,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철저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있음 ○ 또한 구형 단계에서 일반 범죄보다 상향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3. 검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 건강 문제 등 직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	○ 검사 업무과다로 인한 문제를 직시하고, 일선청 지도방문, 간담회, 검사들의 업무부담에 대한 인력 진단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애로사항 및 업무처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음
	4.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직무교육 실시사항을 확인할 것	○ 2015. 11. 4. 피진정인 및 체포·구속 통지 업무와 관련있는 소속 직원들 상대로 체포·구속 통지시 범죄사실에서 전과를 삭제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
	5. 검찰청 내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	○ 대구지검은 각 민원인 대기실 등에 『인권침해센터 운용』 안내문 게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권 침해 신고’ 방법 안내 등으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 ○ 또한, 신관 1층 민원전담관실 내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용하여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음 ○ 대구지검은 2005. 7.이후 지침을 개정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민원은 대부분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법무부, 대검에서 이첩된 사건으로 앞으로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6. 기소중지 사건을 살펴 중국처분 가능한 사건은 중국처분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검은 매분기마다 기소중지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모든 기소중지 사건에 대하여는 시효 완성 약 3개월 전에 재기가능 여부를 다시 철저히 검토하고 있음 ○ 앞으로도 기소중지 사건을 철저히 점검하여 중국처분 가능한 사건을 확인하여 중국처분하도록 노력하겠음
	7.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 27. 성폭력전담부서인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전자발찌 부착자를 비롯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 2015년 재범자 4명 전부 구속기소함 ○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해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하여 적극 수사의뢰 하도록 지시함 ○ 기타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또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등을 적극 활용 중임
	8. 아동성범죄 재범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 27. 성폭력전담부서인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아동성범죄자를 비롯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아동성범죄 재범률 감소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가처분인 보호관찰명령 또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등을 적극 활용 중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9. 최경환 부총리 인턴의 중기공단 불법취업 의혹을 엄정 수사할 것	○ 타청(안양지청)에서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10. 대구 조희팔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	○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투입하고, 대검 등으로부터 자금추적 요원 3명, 대용량 데이터 분석요원 1명을 지원받아 수사팀을 보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14. 7.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재수사 이후 현재(2016. 5.)까지 조희팔 운영의 금융다단계회사 총매출 규모 등 전모를 규명하였고, 범죄수익을 둘러싼 횡령 및 은닉·세탁 사범, 비호세력 등에 관하여 집중 수사하여 다단계회사 행정부사장 강태용 등 4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64명을 기소하였음
	11. 구공판 무죄선고 비율의 증가로 인권 피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검에서 철저하게 감독할 것	○ 일선청에 대하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무죄를 예방하고, 무죄 확정사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평정을 실시하여 그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해 지도·교양함으로써 억울하게 무죄를 선고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12. 스톡킹 사건에 대하여 구속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실무적으로 스톡킹으로 인한 협박·모욕을 일반 협박·모욕과 구분	○ 스톡킹 범죄는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공판하고, 죄질 중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형 단계에서 일반 범죄보다 상향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하여 처리하는 등 실무적으로 스토킹을 중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대구 보복범죄 사건 발생률이 높으므로 사전 예방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검은 강력당직 검사 전용 휴대폰을 활용하여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하여 초동단계부터 24시간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또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 지급, 위치확인장치 지원 안내 등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보복범죄 발생시 전담팀을 편성 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음
	14. 성폭력사범 재범률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 27. 성폭력전담부서인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전자 발찌 부착자를 비롯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 2015년 재범자 4명 모두를 구속기소 하였음 ○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해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 하고,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하여 적극 수사의뢰 하도록 지시함 ○ 기타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재범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관찰명령 또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등을 적극 활용 중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15. 국가 보조금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속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검은 국가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출연 연구비가 유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집중하였음 ○ 그 결과 연구비를 빼돌려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현미경개발업체’, ‘디자인개발업체’,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적발하여 업체대표 등 관련자 2명 구속, 업체 관계자 1명 불구속,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 진흥원,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4개 R&D전문기관으로부터 합계 15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밝혀냄 ○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출연 연구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하겠음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1.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내실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학교, 황제펭귄캠프 등 범죄 예방 프로그램 시행 중(부산지검) ○ 소년범 정서순화를 위한 ‘법사랑 푸른교실’ 운영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하에 음악, 미술치료, 공예, 사물놀이 등 개인맞춤형 정서순화 교육을 추진하는 ‘법사랑 푸른교실’을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 청소년상담 역량강화 직무연수회를 개최하였음</p> <p>- 범사랑위원연합회와 함께 울산지역 학생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청소년 비행예방 방안 연구를 위해 2016년 상반기 청소년상담 역량강화 직무연수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사례 및 소년사건 처리절차 강연을 실시하였음</p> <p>○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요’ 청소년 UCC콘테스트 개최하였음</p> <p>- 범사랑위원연합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청소년 UCC 콘테스트 개최하여 지역여론의 호응을 도출하였음</p> <p>○ 현재 관내 학교 대상 출장 법강연을 확대 실시하여 학교폭력 방지 및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음 (울산지검)</p> <p>○ 검사들이 관내 학교에 출강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등 대상으로 검찰청 체험행사를 실시하며 준법의식 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2016. 3.부터 청소년에 대하여 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시 범사랑위원 선도위탁을 병과하여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진력 중임 (창원지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2. 형사부의 인원 대비 업무량을 조정하여 질 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부서인 특수부 검사 인원을 감축(5명→4명)하여 형사부에 배치하고, 형사부에 배치하는 부부장 검사를 증원(3명→4명)하여 형사부 인력을 보강하였음 ○ 그 결과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이 '15. 8. 31. 기준 7.73명에서 '16. 1. 31. 기준 7.51명으로 감소하였음 (부산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검은 계속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 11.24명('15.기준)으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임 ○ '16. 상반기 검사 인사시 부부장검사 2명 배치 등 검찰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16. 4. 기준 검사1인당 1일 사건부담량 9.6명으로 감소 ○ 업무효율성과 사건처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5. 7.부터 중요사건에 대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부장검사제를 실시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 도모하고 있음 (울산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지검의 2015년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은 6.57명으로 전국평균 6.97명에 비해 업무부담이 과중하지 않은 편임 (창원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3. 묻지마 범죄 단속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칙적 구속 수사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경찰과 협력하여 ‘묻지마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유독약물 등에 대한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흥기 소지사범을 검문 및 단속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부산지검)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인 소위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촉발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군으로, 울산지검은 2014년 발생한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예방과 엄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묻지마 범죄’는 현실 불만, 알코올을 비롯한 약물중독 등 정신 질환이 주된 발생 원인인바, 마약류 중독자와 같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유도가 필요하므로, 현재 시행중인 치료보호 제도를 통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발생시 중요 강력사건으로 분류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강력 전담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여 범죄 단속 및 철저한 수사를 시행하고 있음 (울산지검) ○ 묻지마 범죄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기준의 상한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중임 ○ 범사랑위원연합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CPTED), 골목길 CCTV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음 (창원지검)
	4. 검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 건강 문제 등 직원 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모두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가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부장검사가 검사와 함께 수영, 테니스 등 운동을 하고 있으며, 평소 검사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음 (부산지검) ○ 검사 등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직원 마음사랑 프로그램 집단 상담」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검사실별 또는 계별 소규모 간담회 등을 통해 검사, 직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탁구, 요가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즐겁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것임 (울산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들이 의무적으로 1년 1회 검찰 직원 마음사랑 프로그램(조사자 마음 건강케어)에 따른 진단을 받도록 함 ○ 검사장이 수시로 검사 및 수사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청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고, 부·과별 조직활성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창원지검)
	5. 부산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사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한 취지를 참고하여 관내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계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조 상품 공급책, 밀수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음 (부산지검)
	6. 부산 해외도피사범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수사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관내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이 있어 해외로 도피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음 ○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유무를 명확히 하고, 주변 관계와 피의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해외도피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정지함으로써 해외도피사범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겠음 (부산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7. 부산지검 관내 밀수사범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밀수사범을 약식기소하기보다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강력히 단속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수입 범죄 등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밀수사범의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수사하겠음 ○ 세관의 밀수사범 적발에 대한 수사 지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밀수사범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부산지검)
	8. 기소중지 사건을 살펴 종국처분 가능한 사건은 종국처분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중지(참고인 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매 분기별 실시하고 있음 ○ 공소시효완성 임박사건을 매 분기별 점검하여 종국처분이 가능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재기하여 종국처분하고 있음 (부산지검) ○ 공소시효 임박 기소중지 사건을 매 분기별로 각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부장검사가 중복 점검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종국처분에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99건 공소시효 임박 기록 점검, 14건 재기하여 종국처분(2015.9.~2016.4.) (울산지검) ○ 창원지검은 기소중지 사건 억제를 위해 사경 기소중지 의견 송치 사건은 검찰에서 피의자의 연락처 및 소재 등을 다시 점검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매 분기마다 다음 분기 공소시효 완성 대상 사건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고, 매월 다음 달 공소시효 완성 대상 사건에 대하여 재기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엄정 관리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2016. 5. 부별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을 전수 검사한 후 중국처분이 가능한 사건은 재기하여 중국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창원지검)
	9. DNA 채취 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실무에서 중범죄, 재범 위험성과 관계 없는 사유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고려할 것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채취 대상자를 선별하여 DNA를 채취하고 있으며, 채취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부산지검) ○ 2015. 9.부터 현재까지 DNA 채취 256명 주요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중범죄 재범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DNA 채취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울산지검) ○ DNA 채취 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창원지검)
	10. 윤석민 전 의원 금품수수 사건, 김맹곤 김해시장 사건을 엄정 수사할 것	○ 윤석민 전 의원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2015. 9. 4. 의정부지검에서 구속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임 - 통영지청에서 2015. 7. 관련 사건을 청탁한 자의 현재지 관할이자 관련 진정사건을 수사 중이던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하였음 ○ 김맹곤 前 김해시장은 2015. 11. 27.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 (창원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11. 울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처리 실적 확보에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경찰 내사 착수 시부터 밀착수사지휘를 통해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경찰, 국가정보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반기별 1회)를 개최하여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범죄수집 활동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울산지검)
	12. 사자방 등 공기업 대형부패 사건을 엄단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등 각종 부패범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건 수사 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벌하도록 하겠음 (부산지검) ○ ‘산업 수도’라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업 비리뿐만 아니라 대기업 관련 재정·경제 분야 부정부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임(울산지검) <p style="margin-left: 20px;">※ 비리 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내어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0.~12. 김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김해시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시행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수수한 김해시장 국장, 前 국회의원 등 8명을 인지하고, 7명을 직구속함 ○ 대형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 노력을 경주하겠음(창원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13. 구공판 무죄선고 비율의 증가로 인권 피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검에서 철저히 감독할 것	○ 산하 청에서 공소제기권을 행사함에 있어 증거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휘, 감독하겠음 (부산고검)
	14. 부산지검의 수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향후 성추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교육할 것	○ 자체 수립한 2016년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전 직원 대상으로 성폭력 방지 직장 교육 및 동영상 사이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임 (부산지검)
		○ 2015. 9.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동의대 곽진주 교수), 2015. 12.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울산성폭력상담소 장영순 소장)을 실시하였음 (울산지검) ○ 2015. 9. 10. 전직원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수강율 97%) ○ 검사장이 직원조회 등을 통해 수시로 직원들에게 성추행 재발방지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창원지검)
15. DNA 사전 채취 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고,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집회,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을 주의할 것	○ 2014. 8. 28. 현재의 DNA 채취 합헌 결정 이후, 그 동안 보류되었던 폭처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DNA 채취를 진행하고 있음 ※ 5건 중 위헌결정으로 배제된 1건을 제외하고, 1건은 기채취, 3건은 진행중 (부산지검) ○ DNA 사전 채취 시 적법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집회·노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할 것임 (울산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NA 채취 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창원지검)
	16. 국외도피사범 등에 대한 기소중지를 지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도피사범을 점검하여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 청구 등 필요한 수단을 취함으로써 기소중지 등으로 사건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최대한 기소중지를 지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부산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출국 기소중지자는 '16.4.기준 52명임(여권반납 및 무효화 조치 의뢰 2명) ○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위한 형사사범공조요청, 인터폴 적색수배의뢰 조치하는 등 국외도피사범 검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울산지검) ○ 국외도피사범에 대하여 여권무효화 조치, 형사사범공조, 범죄인 인도요청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국외도피하였다는 이유로 만연히 기소중지 처분하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창원지검)
	17. 국가 보조금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속할 것	<p>○ 금년 상반기 공적자금 편취사범 집중단속 결과, 제조업체 대표 등 1명 구속기소 및 10명 불구속 기소 하였음</p> <p>- 기업구매자금, 식대가산금, 협회 지원금, 국가연구개발비 등 합계 159억 원 편취 적발 그 중 20억 원 회수</p> <p>○ 향후에도 지속적 단속 및 엄정대처, 공적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부산지검)</p> <p>○ 2015년 국정감사이후에 허위세금 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기술신용보증 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11명 입건, 5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하는 등 국가보조금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속하였음</p> <p>※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실시</p> <p>○ 울산지검은 향후에도 국가재정 등 공적자금 침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로 엄단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건전할 발전을 저해하는 부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음 (울산지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9.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기술개발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약3억 원을 임의 사용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를 직구속함 ○ 2015. 12. ~ 2016. 3. 물품구매거래를 가장하는 등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총 49억 원을 편취한 구매기업 대표 11명 등 20명 인지하고, 5명을 직구속함 ○ 2015. 4. ~ 2016. 3. 아파트 전세거래를 가장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2억 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허위임차인 등 24명을 인지하고, 10명을 직구속함 ○ 보조금 편취사범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엄격히 신병처리하여 엄단하도록 하겠음 (창원지검)